

라트비아의 연간성장률 5% 증가 정책, - 현실인가 이상인가?

Morten Hansen, Professor
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in Riga
Head of Economics Department

■ 주요 내용

- ☐ 라트비아의 새 정부는 라트비아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연 5%로 증가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함.
- ☐ 본 정책은 현재 정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연 5%의 경제성장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는 8가지 논거를 바탕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.
- ☐ 라트비아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.

KIEP **대한경제정책연구원**
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
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
TEL 044-414-1076 E-MAIL emerics@kiep.go.kr
<http://www.emerics.org/> <http://www.kiep.go.kr/>
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
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1 주요 이슈 요약

☒ 라트비아의 새 정부는 라트비아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연 5%로 증가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함.

- 유럽 연합 (EU)의 회원국인 라트비아에서는 2004년부터 EU의 소득 수준과 더불어 이주현상이 주요한 경제·정치적 결정 사안이 되었음.
 - 라트비아는 대다수의 EU 국가들보다 빈곤하며, 이는 라트비아가 EU 국가 중 25위의 경제국이라는 점과 라트비아의 1인당 GDP가 EU 가입국들 평균의 64% 수준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음.
 - 이러한 사안들은 다수의 라트비아 국민이 보다 더 높은 임금을 위하여 이주하도록 만들었고, 2008년부터 2010 사이의 경제 위기와 함께 국경이 개방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었음.
- 라트비아의 1인당 GDP는 하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음.
 - 라트비아의 1인당 GDP는 EU 회원국 내에서 크로아티아, 루마니아, 불가리아 다음으로 뒤에서 4위를 차지함.
 - 따라서 다른 회원국의 경제 수준을 따라잡는 것은 라트비아의 중요한 경제·정치적 사안 중 하나임.
 - 본 사안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이주현상을 들 수 있음.
 - 이는 라트비아가 대다수의 다른 국가에 비해 빈곤율이 높고 사람들은 좀 더 임금이 높은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이동하기 때문임.
 - 더불어 2008년~2010년의 세계 경제 위기 시 라트비아 내 일자리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이민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.
- 따라서 2016년 2월 취임한 새 라트비아 정부가 연간성장률을 5%로 증가시키겠다는 점을 주된 정책적 목표로 삼은 것은 아주 반가운 일임.
- 만일 이것이 성공적이라면, 라트비아의 저임금을 비롯한 이민현상의 주요 원인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.
- 그러나 정부 정책이 이상적일지라도, 이 정책이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으며 필자는 아래의 8개의 논거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, 라트비아가 지속적으로 5%의 연간성장률을 기록한다는 정부 정책은 현실보다는 이상에 더 가깝다고 판단됨
 - 첫째, 대략 20년 전 라트비아가 민주화를 달성한 시점의 연평균 성장률이 4.2%이었음을 감안했을 때, 라트비아가 향후 5%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무리한 부분임.
 - 둘째, 라트비아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년간 다른 EU 회원국들의 연평균 성장률을 상당

히 많이 따라잡았으나 단 기간 내 아직 따라잡지 못한 부분을 따라잡는 것은 어려움.

- 셋째, 라트비아의 고용형태는 완전고용에 근접하였기에, 고용의 증대가 추가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음.
- 넷째,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아주 적은 수의 청년층만이 향후 라트비아의 노동력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벗어날 인구를 감안했을 때의 본 정책은 현실적으로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현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게 함.
- 다섯째, 라트비아 노동인구의 타 국가로의 이주 현상은 경제위기 동안의 라트비아의 지속적 성장을 방해하였고, 추후에도 그러할 것임.
- 여섯째,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러시아로부터의 보복성 제재는 수출을 방해하고, 따라서 성장 역시 방해할 것임.
- 일곱째, 라트비아 총수출의 약 75%를 차지하고 있는 유로존의 저성장은 수출을 저해할 것이며, GDP 성장 역시 저해할 것임.
- 마지막으로 은행들이 디레버리지를 시행하기 때문에 지난 8년간 총대출액은 그대로이며, 이는 성장에 자극이 될 수 없음.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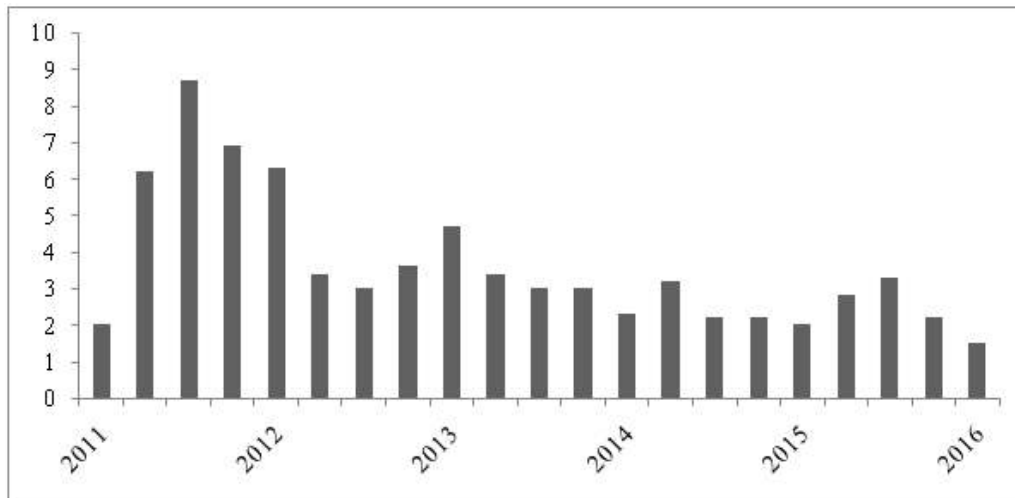
이슈 분석

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, 지속적이고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판단됨

- 2016년 2월 11일, 라트비아는 Greens and Farmers당 출신 Maris Kucinskis를 수상으로 하는 20대 정부를 맞이하였음.
- 새 정부의 주요 포부 중 하나는 경제 성장률을 매년 5%씩 증가시키겠다는 것이었음
- 높은 성장률은 라트비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, 소득의 분배를 개선 및 가속하고, 정부에게 굉장히 필요한 추가 세입도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.
- 하지만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 라트비아가 5%가량의 연간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상당히 오래전의 일임
- 때문에 ‘현실적으로 5%의 연간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?’에 대한 질문에 위에서 언급한 8가지 논거를 바탕으로 불가능하다고 대답할 수 있음.

그림 1. 라트비아 경제의 연간 성장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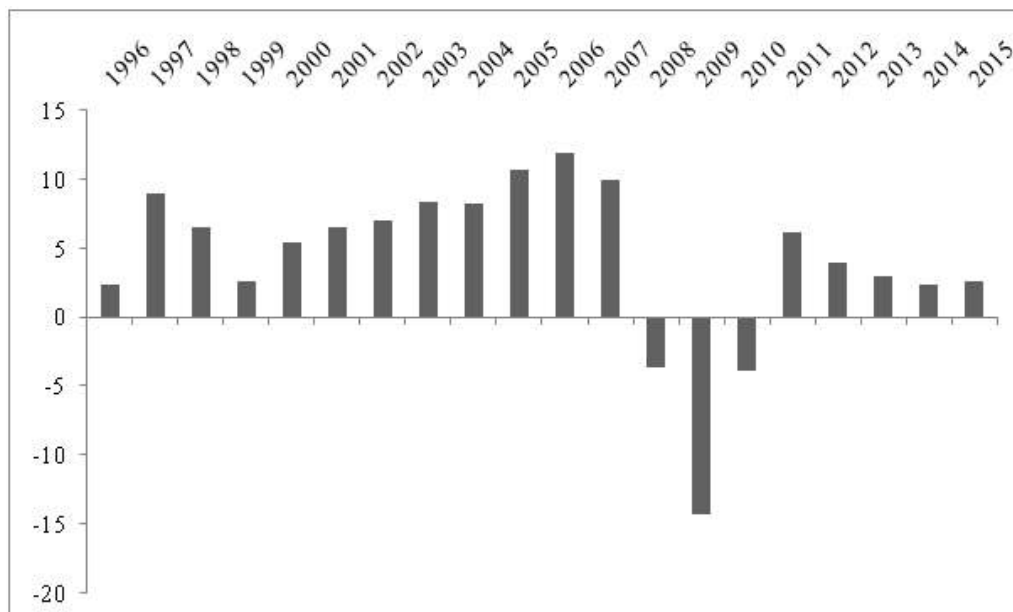
(분기단위, 2011년 1분기 ~ 2016년 1분기)

자료 : 라트비아 중앙통계국, www.csb.gov.lv

- 라트비아 경제는 4년 전인 2012년 1분기 때, 경제 위기 이후 경제가 다시 성장할 때를 제외하고는 5% 수준의 연간성장률을 기록한 바가 없음.
- 때때로, 라트비아의 경제성장률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나, 상당히 큰 폭의 변화 역시 보여주었음.

그림 2. 라트비아의 연간성장률

(1996~2015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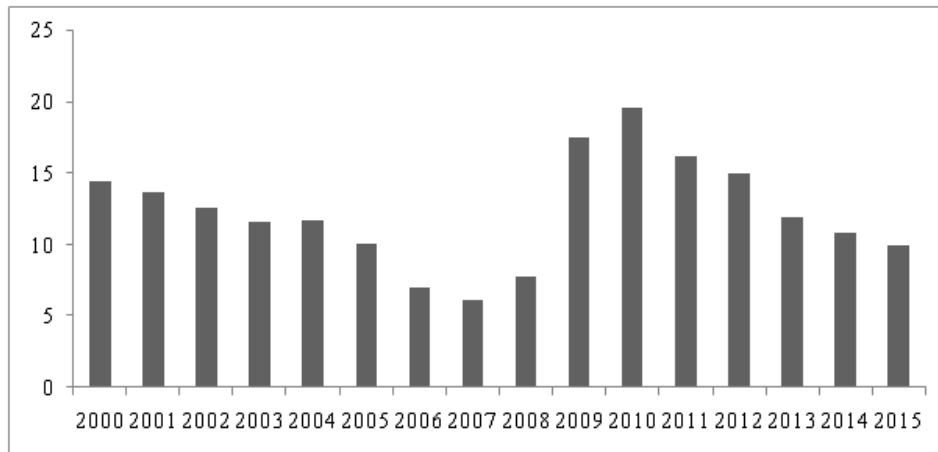
자료 : 라트비아 중앙통계국, www.csb.gov.lv

- 라트비아의 성장률은 2006년의 +11.9%에서부터 경제 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의 -14.3%까지 변화한 바 있음.
 - 지난 20년간, 라트비아는 소비에트 경제에서부터 시장 경제로의 초기적 이행을 진행하였음.
 - 그 기간 실질 GDP는 총 218% 증가하였으며, 이는 매년 4.2%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것임.
 - 따라서 매년 5%의 성장률은 라트비아 경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, 다른 말로 하자면 무리한 요구일 것임.
- 라트비아 경제가 5%의 연간성장률을 기록할 수 없다는 두 번째 논거로는, 지난 20년간 라트비아는 이미 상당 부분 EU 회원국들의 연간성장률을 따라잡았다는 것임.
 - 현재 라트비아의 1인당 GDP는 EU 28개국 평균의 64% 수준이며(Eurostat 2015년 자료), 20년 전에는 30% 정도에 불과하였음.
 - 그러나 따라잡아야 할 것이 많을수록, 그 과정은 일반적으로 보다 더 빠르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임. (낮은 곳에 달린 열매 따기¹⁾)
 - 따라서 이는 추후에 라트비아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을 부정함.
 - 최근 몇 년간 3%가량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, 이대로라면 26년 안에는 EU 평균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임.
 - EU 전체의 연간성장률을 1.5%로 가정하였을 경우, 라트비아의 연간 성장률이 5%로 지속된다면 라트비아는 10년 내 EU 평균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임.
- 라트비아의 5%의 연간성장률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세 번째 논거로는, 현재 고용 상태는 완전고용에 가깝다는 점임.
 - 2016년 5월 9.7%의 실업률은 높은 것으로 보이나, 2000년대에 들어서 2006년과 2008년 사이에는 더 낮았음. (그림 3 참고)
 - 2006년과 2008년 사이에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, 경제가 과열된 상태였음. 이는 라트비아 내에서 구조적 실업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줌.
 - 만일 고용 상태가 완전 고용에 근접한 경우, 성장에 있어서 추가적인 노동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.

1) 독립 직후 몇 년간, 라트비아는 자유 무역이나 EU 법제의 수용과 같은 성장 유도 정책 “낮은 곳에 있는 열매”를 기용할 수 있었음. 그러나 현재에는, 사법 제도 개편이나 교육 개혁과 같은 훨씬 더 성취하기 어려운 사안들만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.

그림 3. 라트비아 연평균 실업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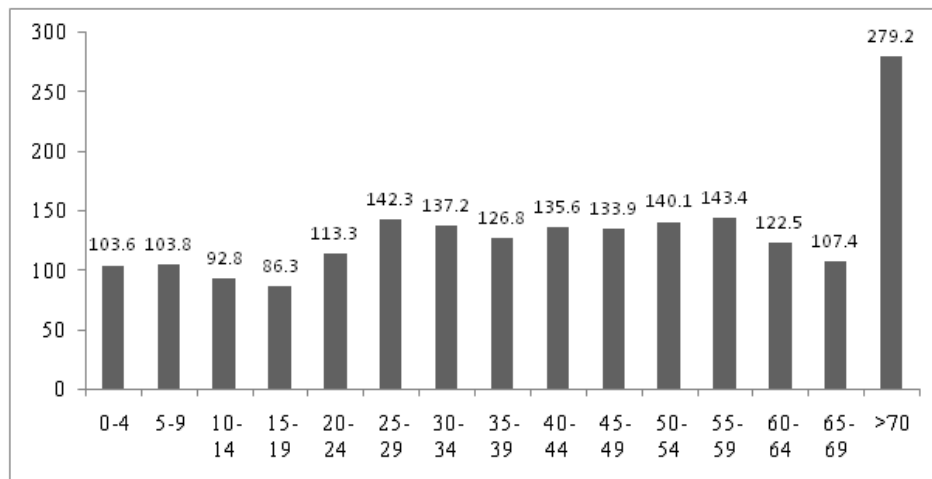
(2000~2015년)

자료 : 라트비아 중앙통계국, www.csb.gov.lv

- 네 번째 논거로는,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전의 1980년대 중반부터 불리했던 인구 구조의 발전임.
 - 이 사실은 대략 30년 전 아이들의 수로서 암시된 것으로, 그들이 자라 청소년, 10대, 그리고는 현재 노동력에 새롭게 투입되는 현재에 나타남. 그림 4는 본 논거를 보여줌.

그림 4. 2016년 라트비아 인구 구조

(5년 단위 계층, 천 명 단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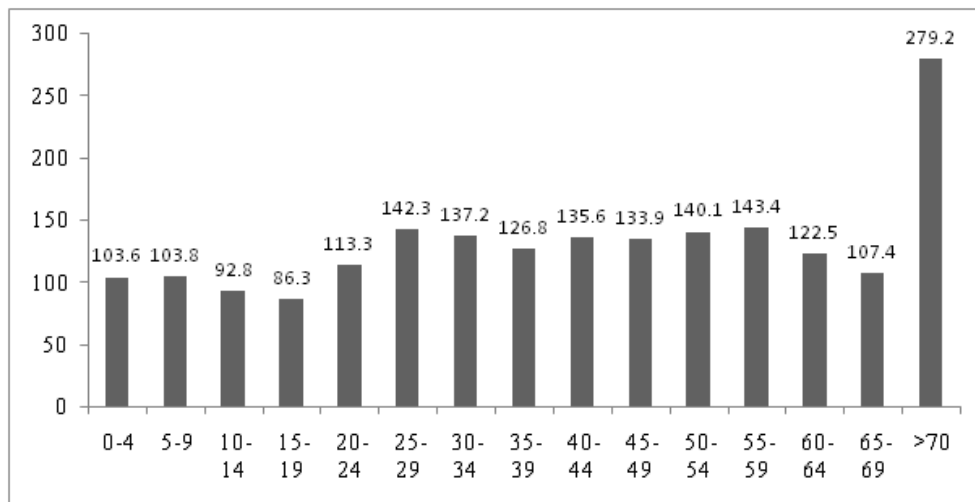
자료 : 라트비아 중앙통계국, www.csb.gov.lv

- 10~14세 계층과 15~19세 계층을 예로 들어볼 때, 이들은 대략 10~12년 이후 노동력에 투입될 잠재적 대상이며, 총합 대략 179,000명에 달함.
- 그러나 다른 쪽을 보자면, 50~54세 계층과 55~59세 계층은 비슷한 시점에 노동 시장을 벗어날 것이며, 이들의 수는 총합 283,000명임.
- 물론 양쪽 전원이 노동력에 기여하지는 않겠지만, 노동 시장이 잃을 대략 100,000명의 간극은 거대한 것임.

- 따라서 보다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야 한다는 뜻이며, 이는 명백하게도 현실적이지 못함.
- 다섯 번째 논거로는 이와 관련된, 이민의 문제를 들 수 있음.
 - 그림 5를 보면 알 수 있듯, 2004년에 EU에 가입한 이후, 특히 경제 위기 간²⁾ 많은 이들이 이민을 갔음³⁾.
 - 10~19세 계층 중 일부 역시 이민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할 것임⁴⁾.
 - 따라서 노동 시장에는 더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며, 5%의 연간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임.

그림 5. 라트비아로부터의 장기 이민자 수

(2000~2015년)

자료 : 라트비아 중앙통계국, www.csb.gov.lv

- 남은 세 가지 논거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것들이기에 언제까지나 바뀔 수는 있으나, 만일 그러하다 하더라도 새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임.
- 여섯 번째 논거는 러시아에 관련된 것인데, 러시아는 라트비아의 3번째 주요 수출국임.
 - 러시아의 크림 반도 침공 이후, EU는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으며 (러시아는 이에 보복성 제재로 답하였음) 이는 라트비아의 대러시아 수출액을 상당히 감소하게 만들었으며, 따라서 라트비아의

2) 20,000명은 대략 라트비아 인구의 1%를 차지한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람. 따라서 라트비아에서는 1% 혹은 그 이상의 이민율이 수년간 지속되었음.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매우 큰 수치임.

3) 2004년 이후에는 다시 이민이 줄어들었는데, 이는 두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음. 첫째, 이민하고자 한 자들은 이미 가능해졌을 시점 - 예컨대 2004년 - 에 이민을 갔음. 둘째, 2005~2007년 라트비아 경제는 활력이 넘쳤으며, 많은 고용 기회들이 존재하였음.

4) 라트비아의 외향 이동의 주요한 요인으로는 라트비아의 저임금, 그리고 경제위기 간 부족했던 고용 기회임. 라트비아는 EU 국가 중 가난한 국가에 속하기에, 아직도 임금은 대부분의 서구권 EU 국가들에 비하여 상당히 낮으며, 이는 외향 이동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함. 또한, 라트비아는 EU에 속하기에, 취업 이민에 그 어떠한 제한이 없음.

경제 성장 역시 둔화됨.

- 러시아와 라트비아 간 제재와 보복성 제재가 지속되는 이상, 라트비아는 러시아와의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얻지 못할 것임.
- 일곱 번째 논거로는, 라트비아 수출액의 75%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, EU에 관련된 것임.
 - EU와 유로존의 저성장은 라트비아 수출의 성장을 둔화시켰으며, 이는 라트비아 GDP의 60%가 수출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치명적으로 작용함
 - 더불어 러시아의 불경기로 인해 라트비아의 수출액이 증가할 가망은 더욱 없어 보임.
-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논거로는 은행 시스템을 들 수 있음.
 - 2004~2007년의 경제 호황은 용자 금액의 확장에 많은 부분 기인하였으며, 그 기간 동안 은행 대출액은 3배가량 증가하였음.
 - 라트비아 정부는 경제 위기와 함께 부채와 차입을 낮추려는 디레버리지 제도를 시행하여 결국 용자액은 제자리걸음을 하였고, 8년이 지난 지금에도 라트비아의 부채는 그대로임.
 - 순 대출액은 그대로이고, 기업과 가구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, GDP 성장은 지속적으로 제한될 것임.

3

결론과 전망

▶ 라트비아 정부는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,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함.

- 새 라트비아 정부는 연간 경제 성장률을 5%로 상승시키겠다는 가치 있는 포부를 제시하였으나 불행하게도,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모든 경제적 논거들 - 과거 행적, 따라잡는 과정에서의 현재 위치, 완전 고용에 가까운 고용 상태, 불리한 인구 구조, 불리한 이민 추세, 러시아의 불경기,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러시아로부터의 보복성 제재, EU의 더딘 발전, 그리고 은행 시스템의 침체 - 은 이 정책 실행에 대한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음.
- 경제적으로 고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, 다른 EU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따라잡는 데에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더 많은 국민이 이주하도록 만들 것임
 - 이는 다시 라트비아 경제에 인재 유출의 부담을 더 할 것이며 결국엔 EU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따라잡는 것을 방해할 것임.
- 라트비아가 제시한 몇몇 정책들을 살펴보면 중장년의 은퇴 나이를 65세로 증가시켰으나 이는 앞서

말한 노동력 유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임.

- 또 하나의 정부 정책은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누진세 장려 정책인데,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지원할 것이고 그들의 이민을 임시방편으로 막을 수는 있을 것임
 - 그러나 이는 언제까지나 라트비아의 주요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건의된 하나의 정책으로서, 제한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함.
- 따라서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들은 모두 ‘구조적 개편’이라는 명칭 아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.
 -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, 라트비아는 사법 시스템이나 고등 교육의 질과 같은 다수의 제도적 체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음.
 - 그리고 EU가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도 고성장 정책을 실현하기에 앞서 고려할 대상임.
- 더불어 라트비아는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정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(연간 성장을 5%를 이루기 위한)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함. **EMERiCs**

출처

라트비아 일반은행 연합 lka.org.lv/en

라트비아 중앙통계국 www.csb.gov.lv

Eurostat ec.europa.eu/eurostat

세계경제포럼 <http://reports.weforum.org/global-competitiveness-report-2015-2016>